

2%)을 저리로 용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식품산업육성을 통해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단속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둔 식품안전 행정으로 전환하며 시민고객들에게는 더욱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성서공단에 NB 캔 처리시설 구축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제품경쟁력 제고

대구지역 바이오업체들의 생산제품을 NB(New Bottle)캔에 담을 수 있는 생산시설이 성서공단에 구축됐다.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이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제품의 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에 연면적 2천3백10㎡의 ‘바이오제품 시 생산지원시설’을 지난 달 완공했다.

바이오제품 시생산지원시설은 새로운 액상제품 포장용기로 각광받고 있는 NB캔을 비롯, 유리병, PET 병 등을 사용하는 바이오제품을 하루 10만병(1백ml 기준)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의 다이와제관이 특허를 보유한 NB캔의 경우 알루미늄 재질로 휴대가 간편하고 고온살균 및 산소와 빛의 차단이 가능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보온·보냉효과가 높은 친환경소재다.

특히 용기의 표면에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고급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음료용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에서도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처리시설이 충북지역에 한 곳 밖에 없고 대기업을 상대로 대량생산만 하기 때문에 지역 바이오업체들은 NB캔을 제품에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시생산지원시설 구축으로 업체들은 시제품을 생산한 뒤 시장의 반응에 따라 필요한 만큼 주문생산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일 라인에서 다양한 용량(1백~3백50ml)의 NB캔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9월 다이와제관과 용기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한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이오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지역의 13개 업체가 23개 제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15개 업체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테크노파크 장욱현 원장은 “바이오제품 시생산지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대구는 물론 전국 바이오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경제부
디자인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디자인상 순회설명회 열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디자인기업 대표 및 디자이너 3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달 1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독일 iF 디자인상 설명회 및 디자이너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취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해외 유명디자인상 수상지원을 위해 세계 3대 디자인상(獨 iF, Red-dot, 美 IDEA)의 하나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獨 iF 디자인상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금번 설명회는 獨 iF 하노버 디자인센터의 Ralph Wiegmann 회장이 직접 참가해 iF 디자인상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특히 '09년 이후 우리 GD(Good Design) 선정상품에 대해 iF 1차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국 우수디자인 인증제도 간에 상호인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이너 해외진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우리 디자이너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돈태 英 Tangerine 社 대표, 성정기 美 Lunar Design 社 디자이너, 유영규 아이리버 이사(前 Nike 디자이너) 등 해외 유명 디자인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를 초청해 해외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참석자 중 희망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1:1 상담도 진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우수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디자인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회 참가기관을 통한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특허청), 서비스 계약 분쟁예방 및 해결(대한상사중재원) 등 디자인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진출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외 디자인상 설명회 및 우리 GD 마크와의 상호인정을 여타 유명 디자인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디자이너의 수상실적을 대폭 제고하고, 디자인

해외취업 세미나도 3개 지역디자인센터(광주·부산·대구)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디자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업계와 포장재 줄이기 공동 노력
 생활용품 합성수지 판촉용 포장재 사라져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미용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18개 업계가 포장재 감량화를 위해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자발적 협약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은 그동안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식돼 온 판촉용 포장재(2차 포장재, 프로모션 팩)를 업계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업계는 삼푸·린스류(LG생활건강 등 5개), 세제류(애경산업(주) 등 5개), 생리대(대한필프 등 4개), 보디클린저(아모페퍼시픽 등 2개) 등 국내 18개 제조 및 유통업계이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삼푸?린스 등 제품의 판촉용 포장재를 사업 첫 해인 금년에는 '07년 대비 30%를 저감한 후,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 5년이 되는 '12년까지 총 80%를 저감하는 '30-80 프로그램'이다.

또한, 업계 자율적으로 제품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절감분을 유통업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린마일리지(인센티브 점수)' 형

태로 부여하는 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판촉용 팩 제품 구입시 적용하고 있는 기존 할인 가격 이외에 추가로 그린 마일리지 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를 적립한 고객에게 그린 쇼핑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포장재를 사용해 생산 및 판매하는 관련 제품에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 재질 등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포장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과대 포장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건강/미용 제품 등 시작으로 관련업계간 제품 판촉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동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간 약 6천2백톤('06년)에 달하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과 이로 인한 포장비용(약 8백40억원)의 절감에 상당한 효과(2012년까지 약 80%)가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금번 건강/미용류 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계기로 오는 7월 식품류, 11월 화장품, 주류, 면도기 등으로 협약체결 제품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동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구리시,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

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구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종이팩은 '06년 재활용율이 29%로 70% 이상인 타 포장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리수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실제 분리수거 형태와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대국민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종이팩은 1백% 천연펄프를 사용하는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분리수거함 미설치, 홍보 부족 및 일반 종이류와 함께 재활용된다는 인식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약 5만9천톤)의 70%가 폐지와 섞여서 배출됐으며, 폐지에 혼합된 종이팩은 제지회사 또는 선별장으로 이송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도로 선별되지 않고 선별잔재쓰레기 또는 공정 폐기물로 처리되어 실제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단독주택간에 분리수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종이팩이 폐지와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공동주택은 품목별 분리배출이 정착된 상태이므로 종이팩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타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토록 하고, 단독주택은 품목별 수거함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종이류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PET 등)과 한꺼번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우선 지난 달 15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공동·단독주택별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및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종이팩재활용협회와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 및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폐지와의 분리 배출 필요성 및 공동·단독주택별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해 전국 시민단체 및 (사)종이팩재활용협회 등과 연계,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보를 통한 전단지 배포, 지하철 광고, 언론보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에는 아파트, 주민센터,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주요거점에 종이팩 분리수거함 2만 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포장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활용율이 채고되면 약 1백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종이팩의 원자재인 천연펄프 수입 감소로

인한 외화절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사항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시행
 정확한 정보 제공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제도 도입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1일로 끝내고 조만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와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내용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제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성분 표시로 인해 자기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가려낼 수 있고 또한 트러블 유발 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유발됐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경로가 좀 더 쉬워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 개정안 발표
 이번 달 개정, 고시

기업의 물류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는 지난 달 4일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 개정안 공청회’에서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물류회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비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회수·폐기될 때까지의 제반활동(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높아 원재료의 조달, 생산, 판매 등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내 기업의 정확한 물류비 계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을 개정하고, ‘표준적인 기업물류비 산출 솔루션’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의 활성화로 인한 반품 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을 감안한 별도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때 제3자 물류기업 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물류활동을 반영해 물류비 과목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쉽도록 했다.

또 물류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업도별 물류비를 물류고정비, 물류변동비로 나눠 추가했으며, 물류비 발생원천도 상세히 규정하고 영역별·기능별 물류비 개념을 구체화해 물류비 계산이 더 쉽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이 널리 보급·활용될 경우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가능해지고 물류관리가 효율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달 중 개정·고시한 후 기업의 회계 및 물류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캔·용기 등 포장재 중금속 기준 강화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기구나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체에 대해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비스페놀 A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했다.

이 기준안에서 식약청은 현재 분리돼 있는 금속체 및 금속관의 규격을 「금속체」로 통합하고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 mg/L이하로 신설하고자 하며, 납 0.1% 이상 함유한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

정책기관

접 접촉하는 부분을 제조 금지토록 했다.

또한, 현행 합성수지제인 폴리카보네이트 중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은 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을 포함한 합계로서 규격(2.5ppm 이하)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비스페놀 A에 대한 규격을 독립규격(0.6ppm이하)으로 분리·강화하고자 했다.

쌀, 수박, 오이 등 농산물에 대해 디비이디시, 아미살브롬 등 신규 농약 19종 신설했으며, 기 설정된 농약인 이민옥타딘, 디페노코나졸 등 74종을 농산물에 추가 설정했고, 이외에도 농산물과 별도로 관리중인 인삼에 대해 만디프로파미드 등 11종 농약을 신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등 과일 및 브로콜리, 단호박 등 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환제품으로 유통되는 식품 중 이물(씻가루)기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물시험법과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기준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물 등의 과학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빙과류 개별제품 제조일자 표시
소비자 알권리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간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표시하

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6개월의 권장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냉동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해야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개별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종이박스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빙과류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 중인 제품이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다른 형태의 제품보다 표시에 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튜브형 등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류(축산물표시 기준)도 2010년 표시가 예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쉽게 구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 포장면적이 1백50cm²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재 표준 제조공정지침’ 발간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 단 공정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규격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I) 및 (II)’을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각각 한약재 1백 품목씩 총 2백 품목이 수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은 각 한약재의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의 단계별 공정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한약재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균일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지침은 한의약육성법 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및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 계획(05. 12. 2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약재 제조업소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은 국산 한약재는 채취 후에, 수입한약재는 가공 전부터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수확에서부터 세척, 절단, 건조에 따른 열원, 건조온도 등을 기재했고, 식약청의 고시에 따른 시험법과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방법 등도 함께 수록하여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앞으로 3백여품목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매년 1백품목씩 선정하여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자를 추가로 받고자하는 업체나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로 연락(전화 02-380-1731)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지기술 표준화 국제총회 서울 개최
국제표준화기구서 표준화 활동 적극 추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이 주최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종이, 판지 및 펄프 기술 총회가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등 31개국에서 전 세계 제지전문

정책기관

가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종이 및 판지의 '백색도 시험방법 관련 표준' 7종과 물리적 특성인 '가속 노화 시험방법 관련 표준' 17종 및 '펄프의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방법 관련 표준' 2종 등 20여종의 표준 제정 및 신규 제안된 다수의 표준이 논의됐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추출액에서 오염화석탄산의 측정방법 표준', 및 '미세골 골판지의 평면압축 강도 측정' 국제표준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의 위상은 2006년 생산량기준 세계 8위, 국민경제상의 위치는 제조업 비중 생산량 0.84%, 고용 비중 0.65%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표준을 통해 종이 및 판지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해 온 연구 결과를 국제 규격에 접목시키고 우리나라 제지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유해물질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단체 등 10곳과 '채널'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단

체, 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부터 홍보를 시작했다.

그 동안 식약청은 2006년 1월 유해물질관리단이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과 기준 마련 등 유해물질 중심의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교류·홍보를 위해 유해물질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식품안전창, 식품안전열린포럼,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비자와의 다양한 안전 정보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해 왔다.

식약청은 최근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안전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해 식품 소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해물질 집중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집중홍보대상 유해물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관심이 있는 유해물질로서 매월 1종을 선정해 소비자단체, 식품기업 및 관련단체 등의 홍보매체(사보)에 기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홍보매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홍보 부수는 월간 소비자단체 약 6만부, 식품관련단체 약 32만부, 식품기업 사보 약 48만부 등 총 86만 부로 매월 또는 격월 1회 연간 1천만 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